

Section III

학술동향

경제발전론의 최근 동향⁽¹⁾

이 근

1. 서론

본고에서는 경제발전론의 최근 동향에서 대해서, 개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언과 그 이후에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과거의 큰 흐름을 개괄하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최근 논의되는 다양한 흐름들, 즉, 제도중시론, 신구조주의론, 지속가능한 발전론 등을 각각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필자가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슈페터 학파의 발전이론을 설명하는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2. 1950년대 고전적 개발론부터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언까지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면 발전론은 전후의 후발국들이 독립하면서 그들의 경제성장 문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50년대 이후 ‘개발론’이란 분야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자본 축적과 고정자산 투자의 차이에서 파생된다고 보았기에 투자만 잘 되면 성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후발국들의 성과가 좋지 못함에 따라 단순히 투자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타 비주류적인 생각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당시 강조되기 시작된 것이 70~80년대의 종속이론입니다. 후발국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후발국의 잉여가 선진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이 이론이 남

(1) 본고는 2013년 11월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발전학회 등 경제학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필자가 구두로 발표한 것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미를 중심으로 품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소위 동아시아 4룡 처럼 일부 성공적인 국가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종속이론에 대한 하나의 반례가 제시됨에 따라 종속이론이 퇴장하고 되고 동아시아에서의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가로 이론의 관심이 넘어갔습니다.

동아시아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히 대외적 개방이 중요하다는 대외 지향적 공업화론 중심의 정책중시론이 나왔고 이러한 담론의 최종적 귀결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후발국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민영화, 자유화를 해야 한다는 워싱턴에 있는 IMF, 세계은행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10가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다섯 가지는 거시 안정화에 관한 것이고 뒤의 다섯 가지는 민영화, 탈규제화,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가장 열심히 따라한 남미에서 성과가 안 좋고 상대적으로 덜 따라한 동아시아에서 성과가 좋음에 따라서, 특히 80~90 양 십년간의 남미의 성과가 안 좋음에 따라 범주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하버드의 로드릭 조차도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는 식의 논문을 JEL에 2006년에 게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모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로드릭은 모든 나라에 일관적으로 통하는 정책을 찾으려하지 말고 각 나라에 성장을 막는 제약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뚫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시장 자유주의적인 접근이 큰 도전을 받고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는 시류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모색되고 있는 몇 가지 접근들에 대해 이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3. 제도 중시론과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

첫 번째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좀 더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제도중시론 내지는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정책 처방은 맞았는데 그 나라의 토양이 좋지 못했기에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토양이란 그 나라의 부정부패 또는 독재라든가 이런 주로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적었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보면 제도, 부정부패, 빈곤,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추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로드릭이 비판하게 됩니다. 아무리 확장된 개념이라도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죽 나열하는 쇼핑

리스트적 접근에 불과하다면서 무언가 항상 빠져있기 때문에 항상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적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접근에서 나열식도 문제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문제가 빠진 것이 결정적인 하자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가장 완성된 것은 에이스모글루가 작년에 쓴 책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도를 착취적인 제도와 포용적인 제도로 나눈 후 포용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성장이 잘 된다는 것을 제도 중시론의 핵심명제로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빌 게이츠가 아주 비판적인 서평을 쓴바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포용적 제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제도 중시론에 대한 제 입장을 말하자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으나 또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나 전근대적 사회에서 좀 더 결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진국 이상의 단계에서는 제도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스페터 학파 입장에서 강조하는 혁신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각 나라의 제도발달 지수를 보면, 1980~2000년대 거쳐서 동아시아나 남미나 다 7점, 6점 최고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남미 간 성과가 매우 달랐다는 것은 (물론 이 제도 지표가 정치적 제도만 포함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도만 가지고 성장이 안 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김병연 교수와 제가 쓴 논문에서도 정치적 제도는 저소득국가의 성장에는 중요하지만 중진국 이상의 국가의 성장에서는 혁신, 고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분석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10가지로 구성되는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중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점이지요.

4. 신구조주의와 산업정책의 부활

그 다음으로 살펴볼 접근으로는 중국출신으로서 세계은행의 부총재를 역임한 북경대학의 저스틴 린 교수의 신구조경제학과 스티글리츠의 산업정책 부활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타부시 되었던 산업정책을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린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신구조주의 경제학이라고 이름 부쳤습니다. 린 교수의 생각의 핵심은 과거 구조주의와 이론적 발상은 같지만 방법론적으로 신고전파 방법론을 수용한 것

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시장실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산업정책이 정당화된다는 식의 주장들을 최근에 피면서 산업정책이 최근에 완전히 경제학의 전면에서 복귀하는 것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정책에 대해 아직도 쉬쉬하는데 유럽 등 선진국 및 다른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린의 생각은 소위 Growth identification and Facilitation이라 해서 각 나라가 잠재적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선정 육성하는 것이 성장에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과거 동아시아 사례를 들면서 자기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 정도 되는 나라를 선정하면 그 나라의 잘 되는 산업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그 산업을 후발자가 육성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신고전파의 비교우위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이 이론에서 문제는 후발자가 항상 선진국의 낙후된 산업을 물려받기만 하느냐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추격형 성장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가능하고, 장하준 교수도 그런 식으로 린 교수에 대해 비판한 적 있습니다. 저는 후발국이 선진국의 산업을 물려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신 성장산업에 과감하게 진출하는 등 leapfrogging(비약전략)을 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빠져있다는 것이 린 교수의 이론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티글리츠는 지식이라는 것이 공공재이기에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R&D가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분명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를 고려한 이론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유럽의 스펀터 학파 생각은 시스템실패가 있어서 혁신과 관련되는 여러 주체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R&D의 효과가 적으니 주체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둘 다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은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인 ‘역량의 실패,’ 즉 역량이 부재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론의 주장처럼, R&D를 할 수 있는데 적정 수준 보다 작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혁신의 근간인 R&D를 아예 못한다는 것이 문제란 뜻입니다. 이를 학교와 비유하여 말하면, 예를 들면 스티글리츠의 생각은 학교에 가게 수업료를 주자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 스펀터 학파는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라는 주장입니다. 제 입장은 애초에 학교의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고 선생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제가 보기에 개도국에 더 적합한 생각인데 스티글리츠와 유럽 스펀

페터 학파의 생각에는 이러한 관점이 빠진 것 같습니다.

5. 유엔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론

또 하나의 관점은 UN을 위시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론입니다. 여기에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녹색성장(green growth) 등의 담론이 포함됩니다. 또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환경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유엔을 근거지로 해서 환경문제, 빈곤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제약의 존재 하에서 이제 지구가 과거와 같이 성장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근간하여 지속가능성을 중시한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에는 강력한 이론적 기반이 없는 대신 다양한 이야기들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온 문제의식들은 빈곤의 함정, 중진국 함정, 상호경합 문제(adding-up)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미국대비 소득수준에서 볼 때, 1960년과 같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국대비 20~30% 수준인 중간 소득에 머무르면서, 이 나라들이 이처럼 중간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국가는 오히려 떨어져서 빈곤해졌는데 이는 빈곤의 함정입니다. 많은 중진국들이 성장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를 못 줄이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등장한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빈곤문제만 보더라도 세계전체 빈곤 인구의 70% 이상이 저소득 국가가 아닌 중진국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호경합(Adding-up) 문제란 후발국들이 다 똑같은 저급의 재화를 시장에 내놓으니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한 지나친 상호 경합에 따른 가격저하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담론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와 관해서 주로 게 고려되는 개념이 비약(leapfrogging)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후발국이 선진국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환경문제를 보더라도, 기존 선진국이 채용한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을 후발국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는 지구의 장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를 표현하는 것이 소위 Environmental Kuznets 커브입니다. 여기서, X축은 소득, Y축은 환경에 대한 파괴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좌표 상에서 선진국이 간 경로 즉 환경 파괴형 경로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니, 후발국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서 환경에 대한 파괴를 축소하는 다른 경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친환경적인 비약입니다. 즉, 다른 경로를 모색하거나 경로를 단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속가능 발전문제도 결과적으로는 과학기술과 혁신에 대한 담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혁신에 의해서만이 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과학기술에 의해서만 환경 친화적인 성장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곤문제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을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이죠.

6. 슈페터학파의 발전론

마지막으로 슈페터 학파의 견해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는 혁신을 가장 핵심 축으로 놓고 후발국의 역량형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즉, 중진국 함정은 남미의 사례처럼 혁신에 제대로 투자를 못해서 발생한 것이었고 반대로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과 대만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자료를 보면 중진국 단계에서 GDP 대비 R&D 비중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슈페터 학파는 혁신시스템을 가장 중심적인 분석대상으로 채용하여 국가 간의 혁신시스템의 차이가 국가 간의 장기성과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Cambridge Univ. Press(2013)]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혁신시스템을 기업차원, 산업차원, 국가차원에서 특허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산업차원에서는 산업 분야별로 추격의 속도와 성과가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IT분야는 추적이 빠르는데 다른 산업분야는 왜 그렇지 못한가 등입니다. 기업차원에서는 후발국 기업과 선진국 기업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 변수는 기술수명(cycle time of technologies)입니다. 산업별로 기술의 수명이 짧은 섹터가 있고 긴 섹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발국은 기술 수명이 짧은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수명이 짧을수록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 기술의 수명이 짧아,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작다는 것이고, 또한 기술수명이 짧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자주 빨리 탄생한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좋은 분야이지요.

과거에 쌓인 많은 기술들을 모두 숙지할 필요가 없는 만큼 후발자가 따라잡기 위한 어려움이 작다는 뜻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후발자의 불리함이 가장 적으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라는 것이고 이러한 분야에 집중한 것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의 비밀이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수명주기는 여러 나라가 출원한 미국특허 자료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때 어떤 기존 특허를 인용하고 있는지를 적시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는 아주 오래된 특허도 계속 인용하고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반면 어떤 분야는 최근 특허만 인용하면 됩니다. 옛날 기술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기술수명이 짧은 것이죠. 기술수명주기가 '10'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평균 10년 된 특허를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술수명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80년대 중반부터 기술수명이 점점 짧은 분야로 특화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IT같은 분야로 특화해가서 틈새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지식의 창출메커니즘을 내재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인용한 특허 중에서 어느 정도가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특허였는지를 파악하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국 특허 인용이 높을수록 지식 생산이 독자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의 고소득 국가의 평균은 8% 정도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80년대에는 2%에 머물다가 90년대 말이 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식생산체계를 내재화하여 외국 기술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기존 기술에 덜 의존하고 토착화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의 기술수명주기를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간 경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위 책에 따르면, 한국은 처음에는 의류 등 저부가가치형 긴 기술수명 섹터로 가다가 80년대 중반부터 짧은 수명주기의 분야로 특화했고 아주 최근에는 아직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기초과학, 바이오테크, 의료, 제약 등 선진국이 하고 있는 긴 기술 수명을 가진 분야까지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추격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의 추격기에(80, 90년대에) 선진국과 다른 경로를 가서 자기만의 틈새(niche)를 찾았다는 것이죠. 저는 두 번의 기술적 전환점(turning point)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단 수명주기 분야로 특화한 추격형 전환점이고, 두 번째 전환점은 2000년대 들어서 선진

국화 하는 단계 즉, 탈추격 단계로의 전환점입니다. 중국도 90년대 말에 전환점을 통과하여, 짧은 기술수명의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미는 그런 전환점이 없었기에 결국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 단계에서 중진국 단계까지는 기존의 경제이론대로 무역에 기초한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하고 선진국의 산업을 물려받는 제품수명주기설이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선진국까지 도달하지 못하기에, 중진국 단계에서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기술에 근간한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 분야를 선택할지 그 기준은 아무도 제시한 적이 없는 데, 바로 기술수명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수명의 기술에 특화해나감으로써 후발자는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을 넘어서는 비약을 하게 되어 선진국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이 책은 실증분석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우스만(Hausmann)같은 학자들은 다각화가 성장에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각화는 최종적인 결과이지 성장으로 이행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그의 논문에서는 어떤 분야부터 다각화해야하는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다각화를 하려면 처음에 어느 분야로 진입해야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어디 분야부터 진입할지에 대한 기준을 그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다각화되어있다는 결과적인 사실만 가지고 후발자도 그래야한다는 논리입니다. 다각화는 보다 기술수명이 짧은 산업 분야들에 계속적으로 진입해 온 결과입니다.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정책적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사이클 타임(cycle time)이 이행 도구 변수이고 그 결과로 지식창출 기제가 토착화 및 내재화되고 다각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발국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국을 처음부터 모방 혹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 전략입니다. 목적지로 바로 가는 직선도로가 있다면, 누구나 이 길로 가려하기에 상호경합 즉 Adding-up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교통정체가 생기는 것이죠. 반면 우회 전략은 거리상으로는 먼 길 인 것 같지만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적어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회로는 종종 험한 산길이기에 고급 운전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운전기술이 바로 혁신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회경로(detour)를 후발국에게 제시해야한다는 제 생각이고, 후발국에게 선진국과 똑같은 전략을 강요한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즉, 나중에 개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처음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미국, 유럽과 FTA를 체결했지만 그 전에는 가장 간헐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열기 위해서는 우선은 달아야한다, 이것이 detour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80년대 이후로 한국은 짧은 기술수명주기의 기술에 특화해서 발전해왔습니다. 탈추격 단계인 이제부터의 과제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긴 기술수명 분야까지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식생산이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체계를 극복하여 지식생산의 체계를 분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생산의 내재화 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30% 정도 인데 한국은 이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7.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주류 발전이론은 힘을 잃었고 새로운 모색들이 나오면서 경제발전론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혁신과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이론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에서도 혁신을 최대의 문제로 인식하여 최근 여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을 통해 추격형 경제성장이라는 성공을 이룬 한국이 발전 모델로 각광 받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6367

팩스: (02) 886-4231

E-mail: kenneth@snu.ac.kr

